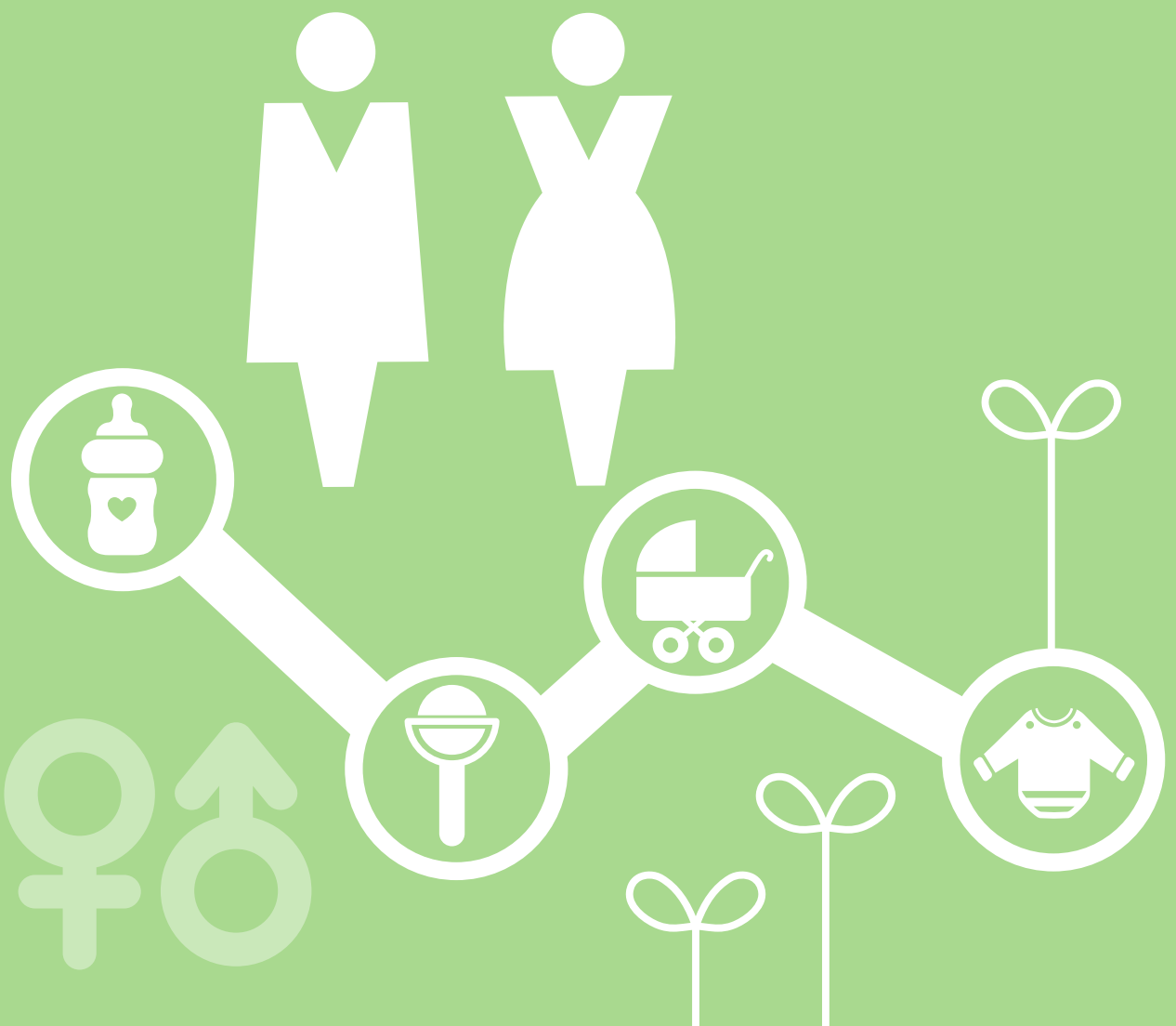


## 03 여성·육아·보육

고용노동부 | 교육부 | 법무부 | 여성가족부



#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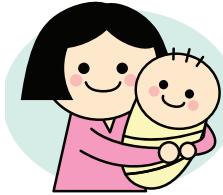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

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 
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

시행일 : 2017년 1월

Bef

135만원



A

150만원



2

법무부

일정한 경우 조부모  
면접교섭 허용

시행일 : 2017년 6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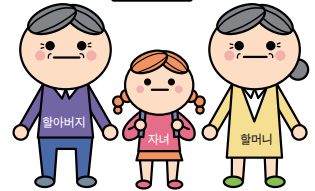
Before

면접교섭권



After

면접교섭권 가정법원



3

여성가족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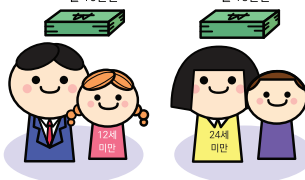
한부모(미혼모 · 부 포함)  
가족 아동양육비 인상

시행일 : 2017년 1월

Before

1인당  
월 10만원

1인당  
월 15만원



After

1인당  
월 12만원

1인당  
월 17만원



유치원, 초·중·고 및 대학교에서  
한부모가족 차별금지 및 교육 의무화

4

여성가족부

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 
만2세까지 확대

시행일 : 2017년 1월

Before

계좌이체



After

국민행복카드



# 1.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

고용노동부 |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6)

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,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 전후휴가(유산·사산휴가) 급여 지원

-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,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
- '17년 사업내용

- 대상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
※ 근속기간·근로형태·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
- 기간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, 출산후 45일 보장 (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, 출산후 60일 보장)  
※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요건
  -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
 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  -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-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(최대 월150만원)을 휴가기간(90일)에 대하여 지원  
※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

##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

- 추진배경 임신·출산근로자 모성보호
-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## 2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

| 고용노동부 |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6)

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사례 확산 도모

-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,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
  -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,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

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

###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

- 추진배경 근로자 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
- 주요내용
  -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육아휴직 허용시 월 30만원 지급(대규모기업은 폐지)
  - ② 육아휴직자가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추가 지급
  -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만원(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)지급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## 1. 초등돌봄교실, 온라인 신청 가능

| 교육부 | 방과후학교지원과 (☎ 044-203-6372)

(예비)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, 신입생은 입학전 예비소집일 등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였으나,
  - '17년 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, 증빙서류를 탑재하여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돌봄교실 출결상황, 급간식메뉴,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

|참고|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([www.neis.go.kr](http://www.neis.go.kr))

### 나이스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선

- 추진배경 (예비)학부모가 돌봄교실 관련 정보, 신청현황 등을 조회하여 돌봄교실 참여 여부를 사전에 선택·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공
- 주요내용
  - ① 돌봄교실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절차 온라인으로 진행
    - 학교현황, 신청집계현황 정보 제공
    - 접수완료, 배정 상황 SMS발송 서비스 제공
  - ② 돌봄교실 출결상황, 퇴실시각, 동행인 등 조회 기능 제공
- 시행일 2017년 2월

## 1.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

| 법무부 | 법무심의관실 (☎ 02-2110-3736)

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었습니다. 그러나 2017년 6월부터는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에도 자녀의 할아버지·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

-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, 부모 일방이 사망, 질병,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  - 다만,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,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.
- 자녀의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할아버지·할머니 등 자녀의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을 인정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참고]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민법 검색

###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

- 추진배경 면접교섭권자의 확대
- 주요내용 ① 일정한 경우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까지 면접교섭권 확대  
②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
- 시행일 2017년 6월 3일

## 1. 한부모(미혼모·부 포함)가족 아동양육비 인상

| 여성가족부 | 가족지원과 (☎ 02-2100-6345, 6342)

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.

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, '17년부터 만 13세 미만 자녀까지 월 12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5만원씩 지원받았으나, '17년부터는 월 17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[참고] 문의 : 한부모상담전화 1644-6621, 거주지 주민센터

신청 :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 차별금지 및 교육이 의무화됩니다.

\*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(2016.12), 공포 후 즉시 시행

### 한부모 (미혼모·부 포함) 가족 지원 강화

-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
- 주요내용
  -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
    - \* (~'12년)월 5만원→('13년)월 7만원→('15년)월 10만원→('17년)월 12만원
    - \* (~'16년) 자녀 연령 만 12세 미만 → ('17년) 만 13세 미만
  -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
    - \* ('10년)월 10만원→('11년)월 15만원→('17년)월 17만원
  - ③ 유치원, 초·중·고 및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 차별 금지 및 교육의무
    - \*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(2016.12.2.) 공포 후 즉시 시행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## 여성가족부

### 2.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

| 여성가족부 | 가족지원과 (☎ 02-2100-6352,6349)

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.

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~24개월(만1세)에서 36개월(만2세)까지 확대되어, 해당 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이용가정은 정부지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또한 현재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였으나, 임신·출산·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가정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[참고] 아이돌봄 홈페이지 (<http://idolbom.go.kr>)

서비스제공기관(통합 안내) ☎ 1577-2514

#### 아이돌봄 서비스에 국민행복카드 도입

- 추진배경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편의 증진
- 주요내용
  - ① 도입이유 :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발생 등 이용자 불편 개선, 임신·출산·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도입
  - ② 서비스 신청절차 :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고, 그 중 1개 선택
    - \* 연계된 후 본인부담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는 없어지며, 서비스 이용이 완료된 건의 본인부담금은 카드사에서 청구
  - ③ 신청인 :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며,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예외적 경우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
    - \* 카드 발급 문의 : BC카드 1899-4651, 삼성카드 1566-3336, 롯데카드 1899-4282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


### 3.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

| 여성가족부 | 여성정책과 (☎ 02-2100-6147)

'17년부터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 됩니다.

-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일정 심사를 통해 '인증'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  - 지금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에 참여하였으나,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'17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- 인증 의무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(기재부 지정), 지방공사·공단입니다.

[참고]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료>정부·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('16.3.22.)

####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

- 추진배경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 및 역할 강화
- 주요내용
  - ① 가족친화인증 :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·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'가족친화인증' 수여
  - ② 의무화 대상 :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·공단 (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제6항)
- 시행일 2017년 3월

### 4.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

| 여성가족부 | 경력단절여성지원과 (☎ 02-2100-6203)

육아·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됩니다.

- 전문기술·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, 지난해 시범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 교육훈련 과정\*이 확대(25→40개 이상)됩니다.

\* 빅데이터,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직종 개발 등 다변화

- 아울러,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추가 지정(150→155개소) 됩니다.

|참고| 새일센터 대표번호 ☎1544-1199

####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

- 추진배경 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
- 주요내용 ①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(25→40개이상)  
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(150→155개소)
- 시행일 2017년 상반기